

농가처벌 위주 'AI 삼진아웃제' 유감



김수형 기자
조선신문

AI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1월 17일 전북 고창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시작한 고병원성 AI는 3월 6일 현재 32건의 의심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26농가에서 고병원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살처분된 닭과 오리도 700만수를 넘어서며 가장 많은 살처분 수를 기록했던 2008년의 AI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들이 철저한 방역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 계열화업체에서도 방역활동에 동참하는 등 업계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의 AI 감염소식은 축산업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그 어느 곳보다 체계적인 방역을 벌였고 감염을 막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던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감염시점이 정부에서 농가에 '삼진아웃제'의 도입으로 보상금액의 감액을 발표한 직후여서 이에 반발하는 농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립축산과학원의 AI 감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성환에 위치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 개발부에서 사육 중인 오리에서 H5N8형 AI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축산과학원에서 사육 중이던 오리 4천500마리를 매몰했으며 과학원내 오염지역(반경 500m 이내)에 함께 사육중인 닭 1만1천마리도 살처분했다.

AI를 막기 위한 축산과학원의 노력은 익히 잘 알려져 있었기에 감염사실은 적잖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축산과학원은 우선 지난 1월 27일부터 전 직원을 연구소 내부 근무자, 자택 근무자, 외부 사무실 근무자 등으로 분류해 출퇴근을 제한했다.

출퇴근시 외부에서 바이러스를 갖고 들어올 우려에서다.

특히 자체적으로 경계단계를 '심각' 단계로 설정하고 정문에서는 모든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했으며 정문에서 계사까지 가는 길에 4번의 소독과정을 거치도록 만들었다.

감염 원인에 대해선 아직 밝혀진 바 없지만 이처럼 철통방역을 실시한 축산과학원에서도 AI를 피해갈 수 없었다는 것은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삼진아웃제' 도입

국립축산과학원의 AI 감염이 있기 전, 농림축산식품부는 AI 발생 농가에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삼진아웃제'란 AI가 발생한 농가는 보상금에서 20%가 감액되며, 2차 발생은 40%, 3차 발생은 전체 보상금의 80%가 감염된 액수를 보상받는 제도다.

이는 다시 말해 발생농가의 보상금을 감액하면서 농가에게도 방역 소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농가들은 반발했다.

AI는 철새의 이동이 원인이 되는 국가적 재난으로서 국가에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농가에 덮어씌웠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농가들은 "축산과학원 같이 최고의 시설에서 완벽한 차단방역을 실시해도 감염됐다는 사실은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삼진아웃제 같은 처벌 위주의 방역 정책은 재논의되어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삼진아웃제, 재논의 필요성 있어

사실 AI 발병농가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어 보상금을 감액했던 것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됐다. 2008년 발생한 AI는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무차별하게 퍼져나갔으며 무려 1,020만5천수의 가금류를 살처분할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남겼다.

2010년~2011년 발생한 AI도 647만수를 살처분했다. 당시 살처분 보상금은 822억원에 달했다. 이번에는 아직까지 철새가 국내에 머무르는 기간이 다소 남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피해규모가 2008년 수준까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삼진아웃제가 도입돼 농가에 대한 보상금이 줄어드는 것이 확정된다면 지금보다 더욱 큰 농가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다.

업계에서도 모든 농가를 똑같은 잣대로 놓고 볼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생산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AI 감염농가 중에는 실제로 시설이 열악하여 질병감염에 취약한 경우도 있지만, 철저한 방역을 펼쳐도 걸리는 경우가 있다"며 "무조건적인 발병횟수에 따른 보상금 감액은 문제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농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농가를 위한 정책이 세워질길 기대해본다. 